

산업기술 국제 공동연구 ‘속도’ 정부, 2088억 투입해 확대 지원

**산업부, 글로벌 기술협력 가속
국제협력 예산 전년비 25.9% ↑
글로벌 기술개발 지원 942억 배정
첨단산업 해외 협력거점 확대 추진
19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예정**

정부가 올해 산업기술 국제 공동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6일 공고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 보유하지 않은 기술을 해외 기관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기술개발 소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사업규모는 전년(1658억원) 대비 25.9% 증가한 2088억원으로 ‘국제공동기술개발(942억원)’,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1052억원)’, ‘글로벌산업기술연계(35억원)’, ‘국제협력기반구축(49억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와 외국정부 간 합의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딩형 기술개발’과 유레카, 유로스타 등 다국간 협력 플랫폼 참여를 통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다자 공동펀딩형 기술개발’ 등 전략기술형 연구개발로 추진된다.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은 첨단산업분야 세계 최고 연구역량을 보유한 해외 연구기관에 협력거점을 설

치하고, 우리 기업과의 중장기·중대형 공동 연구개발(최대 5년, 총 100억원 이하)을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 내재화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열리고, 통합 공고 상세 내용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적극 추진”

농식품부,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

정부가 청년농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후계농 육성자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송 장관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후계농 육성자금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소진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영농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및 사업개선 방향에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계농 자금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송 장관을 비롯해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등 관계 부서와 청년농업인 11명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농업SOC 예산 75% 상반기 집행

지난해 상반기보다 8%p 늘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은 1조 4541억 원으로, 올해 총 SOC 예산(1조 9428억 원)의 74.8%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의 집행률 67%보다 8%포인트(p)가량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1767억 원, 배수개선 3639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713억 원 등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영농, 재해예방 등의 사업 효과도 조기에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56개 지구(준공 5, 계속 46, 신규 5)에 2357억 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은 285개 지구(준공

37, 계속 188, 신규 60)에 4852억 원을 집행한다. 또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돼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는 645개 지구(준공 170, 계속 295, 신규 180)에 7617억 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566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논에 콩과 시설하우스 등 타 작물의 재배가 집단화된 47지구 4614헥타르(ha)를 대상으로 설계빈도가 30년 이상(시설하우스 밀집지역의 경우 50년 이상)으로 상향된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해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각 시·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예산을 배정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상반기 조기 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고용부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설비 보강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설비, 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건설업, 조선업, 폐기물 처리업 등 온열질환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된다.

우선, 폭염 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이동식 에어컨·산업용 선풍기 지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한도 2000만원

물류·창고업 및 위생·폐기물처리업 사업장의 경우, 건물 구조상 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 작업장내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 미만 사업장은 50%)까지 지원한다.

폭염 작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에는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온습도계와,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응급키트 등 기본 예방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건설업 포함)은 내달 7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세종=김대환 기자

에너지 재활용	에너지 효율 개선	노후설비교체	데이터수집	관리·분석	탄소 절감	탄소 발생량 추적		

주요 지원설비.

/산업부

노후설비 바꾸면 ‘최대 1억’ 섬유업계 저탄소 전환 속도

**산업부, 온실가스 8932톤 감축 목표
섬유소재공정저탄소화기반조성 공고
중소·중견기업 70%, 대기업 50%**

탄소 배출이 많은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섬유기업에 정부가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전환자금을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섬유업계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도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 참여기업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섬유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과 함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원단 제조와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이 88.6%로 높아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023년부터 저전력모터, 폐수 열교환기 등 저탄소설비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또 글로벌 섬유업계의 탄소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설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섬유제품에 대해 2027년부터 제품의 공급망 전 과정의 탄소 배출 데이터를 담은 디지털 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섬유·패션 바이어들도 공급망 기업에 대한 탄소 산정·감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70%, 대기업은 50%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 선정된 업체는 탄소감축 전문가 컨설팅(자문)을 받을 수 있고, 탄소감축효과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감축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8932톤 저감한다는 목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나 한국섬유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환경부, 올해 안전성 조사 대폭 확대

환경부는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제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 등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많았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 중 문신용 염료가 38개로 가장 많았고, 세정제(8개), 미용접착제(6개) 등이 뒤를 이었다. 표시 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 중에서는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의 비중이 높았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에 공개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정보를 등록해 위반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불법 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에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